

#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추세<sup>1)</sup>

이 계 우 /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 [ Abstract ]

Since 2007, the government of Korea has been taking steps to become a member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ECD. The government has also been increasing the amount of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is planning on raising it further in the next five years. In the face of these changes, it is timely to look into the prospects and challenges of the Korean ODA as a member of the DAC.

This paper aims to help moderniz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of Korea by reviewing the origins and evolution of advanced countries' ODA to date, highlighting the main trend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DAC member states in recent decades, and drawing some lessons and insights from the review.

## I. 머리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생산과 교역의 선두주자 그룹에 진입하였고 OECD의 회원국이 된지도 10년이 넘었다. 이제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선진원조국으로 구성된 OECD의 국제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10년에 가입하기 위하여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진 원조공여국들은 어떠한 원조정책을 수립하였고 또 실제로 어떻게 그 정책을 운영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신진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기원과 그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 또 최근의 추세를 특징자우려고 한다.

1)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원조참여를 위한 연구기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전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공여주체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원조와 구별된다. 둘째, 공여의 대상이 DAC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정한 중소득 이하의 국가나 국제기구라야 한다. 그 외의 원조는 단순히 공적원조이지 공적 개발원조가 아니다. 셋째, 공여의 목적이 개발 즉 경제사회개발과 복지증진이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적개발원조는 군사적 원조, 종교적 원조, 학술문화적 원조 등 비경제적 원조와 다르며 또 공적 수출신용이나 투자금융 등 기타 경제적 원조와도 구별된다. 넷째, 공여조건이 양허적(concessional) 이라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자본시장의 상업적 대출이나 채권이나 유가증권의 발행과도 구별된다. 양허율은 국제자본시장의 상업적 조건과 비교하여 25%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ODA)는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즉 기술 또는 투자프로젝트 원조이거나, 분야별(sector) 원조이거나, 프로그램 원조(예산, 국제수지, 수입지원 등)이거나, 식량지원 등 긴급재난구호나 채무탕감 등을 포함한다.

## II. 국제개발협력의 기원과 변화

공적개발원조(ODA)는 공여주체가 국제기구인가, 아니면 개별 국가인가에 따라서 다자간 ODA와 양자간 ODA로 구별된다. 다자간 ODA는 1945년에 세워진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 일반적으로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양자간 ODA는 1948~51년 사

이에 미국이 유럽의 17개 국의 경제회복을 위하여 \$16.4 십억을 제공한 마샬계획(Marshall Plan)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Yoo and Lee 2002). 마샬계획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인도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체제에 대치할 수 있는 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경제환경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 마샬플랜에 의한 원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럽국가들은 1948년에 OEEC(Organization of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수혜국간의 원조사용계획과 조정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 후 유럽국가와 일본의 경제재건과 냉전체제에 목적을 둔 1950년 대의 양자간 원조는 유럽국가가 경제환경을 회복함에 따라서 1960년 대부터는 개발도상국을 주된 원조대상으로 삼고, OEEC를 OECD(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는 개발기구로 확대 재구성하였다. 이 기구는 선진국간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함께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OECD의 회원국은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지속적인 공급과 제품의 소비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필요성을 개도국에서 충족할 수 있었다. 특히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OECD는 1961년에 원조공여국들 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DAC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왔다. DAC 회원국들의 원조는 자신들의 경제회복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개도국의 인프라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

었다. 또 1960년대 말에 유엔과 국제개발금융기구 체하에서 선진국은 피어슨 보고서(Pearson Report)를 채택함으로써 각국의 GDP의 0.7%까지 원조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두 차례에 걸친 석유값 인상과동을 거치면서 개도국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교역조건의 악화를 겪게 되고,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적으로 심각한 빈부격차를 노출하게 되었다. 선진국이 제공한 인프라 중심의 원조는 이러한 빈곤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된 인프라도 인력과 기술 및 제도의 결핍으로 유지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세계은행과 기타 국제개발금융기구가 중심이 되어서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사회간접자본 위주의 원조에서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Basic Human Needs)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빈곤퇴치 원조로 초점을 이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식량의 증산을 위한 농촌개발과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보건, 기술훈련 등 사회개발로 원조의 초점이 옮겨갔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빈곤퇴치를 위한 원조가 격감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급격한 외채부담의 증가에 허덕이게 되었다.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재무불이행사태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구조조정차관과 외채탕감원조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였고, 양자간 원조도 이러한 국제기구의 원조에 협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외채탕감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은 석유파동의 영향을 어느 정도 흡수하였으나 경제적 불

황을 겪게 되면서 원조의 규모를 삭감하게 되어 빈곤퇴치를 위한 원조재원이 고갈되게 되었다. 따라서 개도국은 외채누적과 경기침체, 정치불안, 만성적 빈곤에 빠지게 되었다.

### III.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추세

1990년대 이후의 국제개발협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1. 빈곤퇴치와 개발협력

동독의 붕괴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USSR)의 해체로 시작되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공적개발원조가 격감하고 경제자유화로 내포되는 세계화의 추세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은 물론 국가 내에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빈곤인구는 증가해왔다. 더욱이 냉전의 종식은 많은 개도국과 체제전환경제(transitional economies)내에서 지역적, 종족적, 종교적 분쟁을 야기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빈곤인구가 속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인구의 18%에 달하는 11억의 인구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저소득 중 국가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조규모는 격감하였다. 양자간 원조의 대중을 이루었던 미국의 예를 들면, 1970-80년대에 GNP의 0.35%를 원조로 제공하였으나 1990년 중반에 들어서는 0.23%의 원조만 제공하였다. 그나마 제공된 원조는 주로 구 동

구권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체제전환(economic transition)을 위하여 제공되었고 또 아시아, 러시아 및 남미 지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자금지원에 활용되어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빈곤 문제를 외면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를 다시금 빈곤퇴치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1995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정상회의(Social Development Summit)에서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후, 선진국들이 개발협력을 목적으로 창설한 OECD의 DAC는 1996년 5월에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하여,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국제개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IDGs)를 공표하

였다. 이러한 목표는 2000년 9월에 세계 189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UN의 새천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는 8개 항에 달하는 새로운 목표로 재천명되었다. 구체적으로 MDG는 절대 빈곤퇴치, 보편적 초등교육달성, 양성평등과 여성지위 향상, 모자보건확대, 영아 및 아동사망을 감소, 전염병 퇴치, 상하수도 위생시설 보급과 환경보호,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8개 목적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2015년 까지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 2. 공적개발원조 개념의 확대

빈곤문제의 해결에 무력한 공적개발원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OECD/DAC는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개발과 안보를 통합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개념의 확대: 무역, 투자, 개발정책 등 개도국 정책간의

〈표 1〉 새천년 개발목표 (MDG)

목 적	목 표
1. 극빈과 기아근절	목표 1: 1일 소득 1달러 이하 인구반감(1990년-2015년)
	목표 2: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를 반감(1990년-2015년)
2. 보편적 기초교육달성	목표 3: 2015년까지 전국의 소년·소녀 구분 없이 모든 기초 교육과정을 끝낼 수 있게 보장
3.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목표 4: 가능한 2005년까지 기초 및 중등교육과정에서, 2015년까지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적 불평등 제거
4. 아동 사망률 축소	목표 5: 1990에서 2015년까지 5세 이하의 사망률을 2/3 줄이기
5. 모성건강증진	목표 6: 1990년에서 2015년까지 모성 사망률(MMR)을 3/4 감소시키기; 전 산모의 의료시설 접근 가능하게 하기
6.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과의 전쟁	목표 7: HIV/AIDS의 전염을 2015년까지 현상유지 내지 감소시키기 시작하기
7.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목표 8: 상하수도 및 위생시설 미접근 인구 반감; 2020년까지 백만 도시빈민 생활수준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정책에 반영; 환경자원유실 반전
8. 지구적 개발파트너십 구축	목표 9: 자유무역 금융제도 개발; 무역-금융-원조에서 최빈국 특별 고려; 개도국에 신기술과 기본약품 접근 기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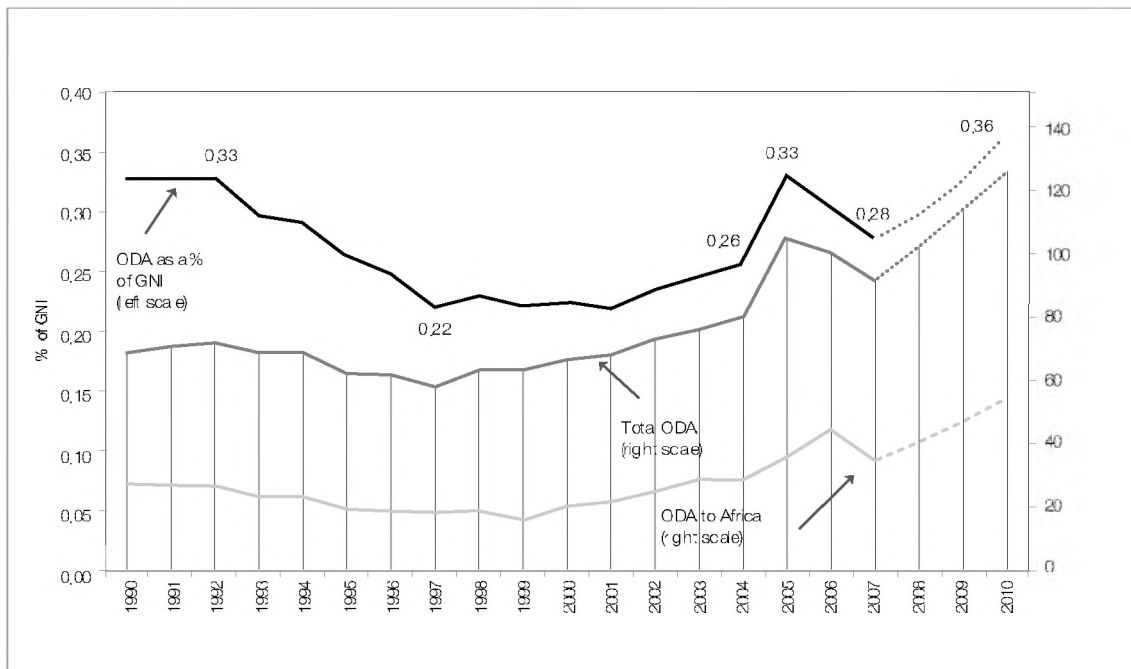
일관성 유지; 국별 지원의 선별성(selectivity)강화; 개도국의 국가발전정책과의 일치(alignment); 원조의 질 향상과 효과성 증대; 원조 이행점검과 성과측정;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최근 안보와 분쟁 예방이 개발원조의 주요 이슈로 논의됨에 따라 ODA의 개념을 확대하여 안보지원 활동을 공적개발원조통계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2004년 DAC 고위급회의에서는 아래 8가지 항목을 공적 개발 원조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예를 들면, 민주적 거버넌스와 안보체계에 대한 문민통제를 향상시키는 능력배양, 안보체제 검토, 안보관련 지출관리, 안보체제에 대한 시민사회 역할 강화, 소년병사해체, 신흥군축과 분쟁예방 조치, 소형 무기와 경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원조 등이다. 특히 일본은 2002년에 제정된 국제 개발협력헌장에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Sunaga 2004, Irada 2005).

### 3. 공적개발원조의 양적확대

MDG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은 2002년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발재원회의(Development Finance Conference)를 개최하고 선진국이 당시 GNI 대비 0.25% 수준에 있는 ODA를 2009년까지 0.5%로, 또 2015년까지 0.7%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최근에는 MDG 달성 중간점검을 위해 개최된 2005년 9월

〈그림 1〉 순 ODA의 국제적 현황(2007)과 추정(2008~2010)



※ 자료: DAC (2008)

의 제60차 UN 정상회의에서 ODA 확대요구가 재확인되었고, ODA중 최빈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0년까지 GNI의 0.15%~0.2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독자적으로 원조증대 일정을 제시하였고, 미국, 캐나다, 일본은 공여액 중심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ODA의 규모는 2004년 현재 80십억 달러정도에서 2010년에는 130 십억 달러에 달하며 GNI의 0.36%에 달할 것으로 DAC는 전망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합의의 중간점검을 2007년에하기로 하였다. 2005-2006년 사이에 원조는 확실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2005년에 이어서 원조액이 \$100 십억을 초과하였고(\$104.4십억), DAC의 2006년 목표인 GNI대비 원조액 0.33%를 이미 2005년에 달성하였다. 이는 2004년에 비하여 0.07% 포인트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오직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최근에 DAC에 가입한 국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006년의 원조는 GNI 대비 0.31%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6년의 총 원조규모의 증가는 내실있는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06년의 총 원조액의 1/5에 해당하는 \$19백만이 개도국, 특히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부채탕감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도국이 사용할 수 있는 원조액은 오히려 0.8% 감소하였다. 2007년에도 총원조액은 \$100십억을 능가하였으나(\$103.5십억), 2006년에 비하여 감소해서 GNI 대비율도 0.28%로 줄었다. 다만 부채탕감액이 2006년의 절반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가능한 원조액

은 2006년에 비하여 2% 증가하였다.

#### 4. 원조효과성의 제고

원조의 양이 확대됨에 따라 원조의 질, 특히 원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논의가 국제원조의 중심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원조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원조의 효과가 확대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국민들을 설득하여 원조의 양적확대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또 원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조가 비효율적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원조의 효과 특히,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는가에 관한 연구는 논쟁의 끝을 보지 못하고 여러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 주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계우 2007).

첫째, 원조는 경제성장에 어떠한 보탬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1970년대부터 주로 Freedman, Bauer, Easterly, Rajan and Subramanian 등의 연구가<sup>2)</sup>들에 의하여 최근까지 주장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원조는 경제성장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만, 수익체감(diminishing returns)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1990년대에 IMF의 연구가들(Dalgaard, Hansen, Tarp)에 의하여 주장되어왔는데, 원조가 많을수록 경제성장은 커가지만 원조의 규

2)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원조는 관료조직을 확대하고, 엘리트 계층을 더욱 부유하게 하고, 부패한 정권을 유지시키며, 소위 네덜란드 병을 키우며, 농산물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농민소득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모가 커짐에 따라 원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다는 것을 발견했다.

셋째, 원조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여국과 수혜국의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다. 먼저 수원국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원조가 경제성장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세계은행의 연구가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왔는데, 수원국의 국민들이 시민자유권을 많이 향유하고 있을 때에만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원조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Jonathan Isham, Daniel Kaufmann, Lant Pritchett). 또 Burnside와 Dollar (2000)는 수원국이 올바른 거시경제 정책이나 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때에만 원조가 경제성장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주장은 원조공여국의 경험과도 일치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고, 국제원조기구나 선진 원조공여국은 이러한 발견을 실제 원조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2001년에 새천년도전계좌(Millennium Challenge Account)라는 새로운 원조창구를 개설하고 최빈국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무상원조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sup>3)</sup>.

넷째, 가장 최근의 방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원조의 경제성장효과는 원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발견이다 (Clemens, Radelet, Bhavnani 2004). ① 식량 제공과 같은 재난구조나 인도주의적 원조는 경제성장에 반대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발견했다. ② 교육, 보건, 환경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원조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이지만 미약한 효과를 가져왔다. ③ 도로, 관개, 발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등 단기간에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원조는 경제성장에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그 효과가 체감적으로 나타났다<sup>4)</sup>.

공적원조의 양적확대와 병행해서 선진국은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왔다. 2005년 2월 DAC의 파리고위급 포럼에서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파리선언이 채택되었고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12가지의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와 평가방법에 합의했다. 파리선언의 핵심은 첫째, 개발도상국은 주인의식 (Ownership)을 가지고 자체적인 빈곤퇴치개발전략 (Poverty Reduction Strategies)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선진국은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원조를 제공해야한다(Alignment). 셋째, 원조공여국들 간에

3)이에 반하여, 원조의 효과는 공여국의 원조의 질에 의존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유상원조 (loans and credits)가 무상공여 (grants)보다 더욱 효율적이며, 다자간 원조가 양자간 원조보다 더 효율적이고, 국적 비연계성 (untied) 원조가 국적 연계성 (tied) 원조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방대한 조직을 가진 원조기관과 보고의무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하는 원조기관의 원조나 감독과 평가를 경시하는 원조기관의 원조는 비효과적이며, 수원국에게 주인의식을 심어 주고 원조의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하여 광범위한 참가기획과 결정권을 부여하는 원조기관의 원조는 경제성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DAC회원국사이에서 흔히 주장되지만,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는 못 하였다.

4)이러한 직접적인 원조가 1% 포인트 증기함에 따라 경제성장은 4년간에 걸쳐서 년 평균 0.3% 포인트 상승하였다. \$1의 직접적 원조를 제공하면 수원국 소득이 \$1.6증가하는 셈이다. 원조의 효과가 체감하기 때문에 현재 각국이 제공하는 직접적 원조의 평균 3배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원조의 효과가 극대화 되고 그 이후에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직접적 원조가 증대되면 경제성장의 효과도 커진다는 결론이다. 또 이러한 원조의 효과는 수원국이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구축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원국에서는 그 원조의 효과가 더 컸을 뿐이며, 모든 수원국에서 다 같이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 보건 등 인력투자가 잘 된 수원국에서 그 효과가 더 컸었다.

〈표 2〉 파리선언의 12가지 이행점검 지표 (2010년 달성목표)

5대 원칙	12개 지표
1. 주인의식	1. 실행가능한 국가개발전략
2. 수원국개발전략과 공여국원조의 일관성	2a. 신뢰할 공공재정관리시스템
	2b. 신뢰할 조달체계
	3. 수원국 우선순위에 따른 원조
	4. 능력개발활동 지원비중
	5a. 수원국 재정관리체제 활용비중
	5b. 수원국조달체계 활용비중
	6. 원조집행기관 중복 방지
	7. 원조의 예측가능성 강화
3. 공여국간의 조화	8. 원조의 국적비연계성 (untiedness) 강화
	9. 공여국간 공동의 제도와 절차
	10a. 공동현지조사단
4. 성과위주의 관리	10b. 공동 국가점세 분석
	11. 성과위주 체제
5. 상호책임	12. 상호평가책임의 부여

※ 자료: OECD

협약의 조정을 통하여 조화 있는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Harmonization). 넷째, 원조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Result-Driven) 원조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수원국과 공여국이 상호책임감(Mutual Accountability)을 가지고 협력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첫 중간점검(2006년) 결과는 특히 세 가지 부문에서 진전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국적 비연계성 원조의 비율이 아직도 저조하고, 둘째, 공여국은 수원국의 재정관리 및 조달시스템을 아직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공여국은 수원국에 설치한 현지사무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 5. 국적 연계성 원조의 감소 (비연계성 원조의 확대)

수원국은 원조자금으로 원조 공여국에서 생산된 물자와 용역만을 구매해야 한다는 국적연계성(tied) 원조는 원조의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DAC 설립초기부터 꾸준히 지속하여 왔었다. DAC의 연구에 의하면 국적연계성 원조는 비연계성원조 보다도 20~30%의 원조자금을 낭비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원조의 효과성 제고가 중요한 의제로 강조됨에 따라, DAC회원국은 1992년에 헬

싱키 팩키지(Helsinki Package)라는 합의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연계성 개발원조가 수출금융에 대한 보조금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출금융은 공개경쟁과 자유시장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연계성 개발원조는 시장조건으로는 금융조달이 어려운 경우 (commercially non-viable)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은행으로부터 IDA조건(무이자; 30~40년 상환)으로 차관을 받을 수 없는 상위중소득국가(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UMICs)에 대해서는 국적 연계성 원조를 지원할 수 없고 순수한(100%) 비연계성원조만 제공해야하며, 개발프로젝트가 SDR 5천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제공개경쟁입찰(ICB)을 통

해서 물자와 용역을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다만 개발프로젝트가 SDR 2백만 미만이거나 증여율(grant elements)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와 최빈국에 대한 원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2002년 1월부터 발효한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권고안에서는 최빈국에 대해서도 국적 비연계성(untied)원조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특정 개발투자프로젝트와 무관한 독립된 기술협력원조나 식량원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06년에는 연계성원조를 허용하던 소액원조의 상한선을 철폐하였고, 2008년에는 비연계성원조의 권고를 최빈국뿐만 아니

〈표 3〉 DAC 양자간 원조에서 국적 비연계성 원조의 추세

기준	1999/2001 연평균	2004/6 연평균	2006	2007
최빈국에 대한 양자간 원조	100.0	100.0		
- 완전 비연계성	58.0	77.0		
- 부분 비연계성	3.3	0.1		
- 비연계성 <u>소계</u>	<u>61.0</u>	<u>77.1</u>	<u>82.0</u>	
- 연계성	8.0	10.0	13.0	
- 비보고	31.0	12.0	5.0	
전 개도국에 대한 양자간 원조	100.0	100.0		
- 완전 비연계성	51.0	65.0		
- 부분 비연계성	2.2	0.5		
- 비연계성 <u>소계</u>	<u>53.2</u>	<u>66.0</u>	<u>73.0</u>	
- 연계성	9.0	17.0	19.5	
- 비보고	37.0	17.0	7.3	
총 양자간 원조 중 비연계성 원조의 비율	53.2%	66.0%	73.0% (보고율 92.7%) (CPS 자료) 88.9% (DAC 자료)	84.8% (보고율:99.8%) (DAC 자료)

※ 주: 기술협력원조 및 원조행정비 제외

※ 자료: DAC(2008/), Clay et al (2008)

라 최대부채빈곤국(HIPC)에 대한 원조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합의하였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권고가 투명하게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으나, 점차 국제 비연계성원조의 영역이 더 확대되고 국제 연계성원조는 축소되어가는 추세에 있음을 틀림없다. 자료의 제약 때문에 일관된 지표가 없지만, OECD의 DAC 원조 자료에 의하면, 2007년에 85%의 양자간 DAC원조가 비연계성원조였다. 그러나 최근 OECD의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양자간 DAC 원조의 73%가 비연계성원조였다. 이것은 1999/2001년 간의 비연계성원조 평균인 53%와 비교된다. 뿐만 아니라 비연계성원조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양자간 원조나 총원조가 줄어든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양자간 원조에서 비연계성원조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최빈국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비중이 더 늘어난다는 증거는 있다 (Clay et al 2008).

## 6. 무상원조의 증가

1990년부터 다자간 국제원조기구의 유상원조(차관)는 증가추세이지만 무상원조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하여, 양자간 원조에서는 차관은 급격히 줄어들고, 무상원조가 현저히 늘어가는 추세이다. 양자간의 무상원조가 증가하는 것은 중앙 및 동부유럽에 위치한 구 소련 연방국가에 대한 무상원조가 증가한 것과 아프리카 등에 위치한 최빈국에 대한 부채탕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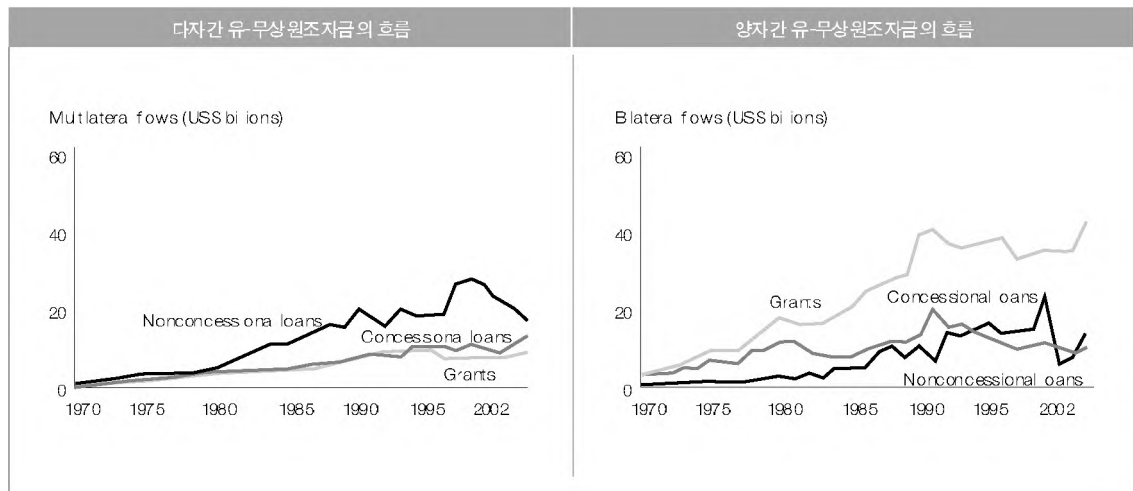
다자 원조기구의 원조에서 차관의 비중이 늘어가지만, 이러한 추세는 양자간 무상원조의 증가규모를 능가하

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양자간 유상원조도 급격히 감소해왔다. 2001~2003년 사이에 공적 유상원조는 \$52십억 줄어들었지만 공적 무상원조는 \$20십억 증가하였다. 따라서 공적원조의 순 총액은 \$32십억만큼 줄어들었다.

공적개발원조의 총 순액에서 양자간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세를 보면 1990년에 양자간 무상원조는 63%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에는 69%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80%로 그리고 2006년에는 76%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양자간 유상원조는 1990년의 11%에서 2002년에는 1%로 줄어들었고 2005년과 2006년에는 -3%로 줄어들었다.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도 사실상 무상원조에 해당하지만, 전체 ODA의 30% 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무상원조의 비율을 증가해온 DAC 회원국은 2005~2006년에 걸쳐서 평균 양자간 원조의 86%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전체 ODA의 89%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비율은 2007년에도 대동소이하다. 양자간 원조 중 각 국별 유·무상원조의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DAC회원국들이 양자간 원조의 90% 이상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소수의 회원국들은 아직도 낮은 비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으로서 무상원조가 41%의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태리의 경우에도 무상원조가 67%이며, 독일도 76%, 프랑스 79%, 스페인은 84%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다자간 및 양자간 유·무상원조 자금의 흐름



※ 자료: World Bank

〈표 4〉 공적개발원조액의 증감 (2001-2003)

순 공적 무상원조 (증여) (Net Official Grants)	+\$20B
순 공적 유상원조 (차관) (Net Official Lending)	-\$52B
순 공적 원조 총계 (Net Official Flows)	-\$32B

※ 자료: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표 5〉 DAC 공적 무상원조의 상대적 증가 추세 (1990-2006)

(단위: %)

	1990-1991 평균	1995-1996 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공적개발원조의 총 순액 (\$백만)	(51,571) 100	(57,277) 100	(58,297) 100	(69,065) 100	(79,132) 100	(107,099) 100	(101,121) 100
1. 양자간 무상원조 (증여)	63	63	69	75	72	80	76
2. 양자간 유상원조 (차관)	11	6	1	-2	-4	-3	-3
3. 국제기구 등에 대한 출연원조	26	31	30	27	32	23	27

※ 자료: DAC (2007)

## 7. 사적 무상공여의 증가

최근에 들어서 수원국 정부는 공적부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반면 사적 부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대 개도국 사적 자금의 흐름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적 자본의 흐름은 부채(차관 또는 융자)를 제외하고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유가증권투자 와 직접투자액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밖에 비영리성 자본의 흐름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NGO가 제공하는 무상공여(grants)가 증가하였

고, 근로자의 본국 송금은 공적원조자금이나 사적용 자자금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에 공적원조자금이 \$15십억 상당(부채탕감을 제외하면 \$10십억) 증가한데 비하여, NGO의 무상공여금은 \$5십억 상당 증가하였다. 근로자의 본국송금은 약 \$80십억 상당이나 증가하였다. 사적 무상공여자금은 \$11십억에 이르렀다 (Roodman and Standley 2006).

공적개발원조자금과 사적자금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 같다. 1990년에 공적개발원조자금은 대 개도국 자본이동의 흐름 중에서 64%를 차지하였고 사적자금은

〈표 6〉 민간자금의 대 개도국 이동의 추세 (1990~2007)

(단위: %)

달러	1990- 1991 평균	1995- 1996 평균	2003	2004	2005	2006	2007
I. 공적개발원조	(54,574) 64	(57,277) 32	(69,065) 55	(79,432) 50	(107,099) 35	(104,370) 34	(103,491) 23
II. 기타 공적자금 흐름	(7,890) 9	(7,861) 4	(-348) -0	(-5,601) -3	(1,430) 0	(-10,728) -3	(-6,438) -1
III. 사적자금의 흐름 (시장가격)	(17,792) 21	(108,610) 60	(46,573) 37	(75,262) 47	(179,559) 59	(194,762) 64	(325,350) 74
1. 직접투자	29	31	39	48	33	43	43
2. 양자간 증권, 기타	-9	28	-1	3	29	24	34
3. 다자간 사적자금	2	-0	1	-3	0	*	-2
4. 수출금융	-1	2					
5. 부채탕감			-2	-0.5	-3	-3	-0.6
IV. 사적 무상원조 (증여)	(5,240) 6	(5,871) 3	(10,239) 8	(11,320) 7	(14,712) 5	(14,848) 5	(18,508) 4
총계 (순자금 흐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백만달러

※ 자료: DAC (2007, 2008)

〈표 7〉 근로자 송금의 규모

	1990	1995	2000	2004
중상위 소득 국가(upper middle income)	5.7	8.6	13.1	26.8
중하위 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17.5	34.8	41.9	55.6
저소득 국가(low income)	8.1	13.3	21.7	43.4
총 계	31.3	56.7	76.8	125.8

※ 자료: World Bank (2005) Global Development Finance

21%에 그쳤지만, 2006년에는 그 비중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즉 공적자금은 34%에 불과하나 사적자금의 대 개도국이동은 64%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공적개발원조자금과 시민단체의 원조자금은 상호강화작용을 하고 있다. 공적원조자금이 상대적으로 증대된 역할을 한 2000년대 초에 시민단체의 원조자금도 같이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 공적원조자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자, 시민단체의 원조자금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8. 빈곤국과 중소득국 간의 원조의 균형은 불변

원조 특히 무상원조의 비중이 빈곤국과 중진국 사이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중상위국에서 중하위국으로 원조의 중심이 이전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구 소련연방의 붕괴 후에, 동구권 국가에 무상원조가 많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나, 차관이 중진국에 많이 제공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선진 공여국 원조의 초점이 빈곤퇴치라는 표면상의 인도주의적 공적원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실제로는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문화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상원조는 중소득 국가보다는 소득수준이 낮고 부채(유상원조)의 상환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최빈국과 기타 저소득국가에 더 많이 제공되어야 논리적이며 인도주의적 목적에도 맞다. 그러나 1970년이래 무상원조는 점차 중소득 국가에 더 많이 배정되고 저소득 국가에 배분되는 비율은 1990년이래 줄어들어 왔다. 다만 위로가 되는 것은 유상원조가 저소득국가보다도 중진국에 더 많이 배정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원조를 배분할 때에 개도국의 소득수준과 정부의 업무수행성적 특히 정책과 제도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원조를 배분하는가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어 있다. 2007년 DAC의 자료에 의하면 소득수준과 정부의 업무수행성적에 따라서 배분된 원조는 극히 적은 분량에 불과하고, 또 이러한 기준에 따른 원조가 전체원조에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Easterly(2007)와 Easterly and Pfutze(2008)의 경제통계학적 연구에 의하면, 선진국들의 원조는 개도국의

필요성(소득수준)과 정책 및 제도의 우수성과 상관없이 배분되며, 최근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행태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

해 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Dollar and Levin 2004, Claessens, Cassimon and Van Campenhour 2007, World Bank 2008).

그러나 다른 일련의 경제통계학적 연구에 의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필요성과 정책 및 제도의 우수성에 점차 더 무게를 두고 수원국을 선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도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2004년 이후 더 미약

원조의 배분에서 개도국의 필요성 즉,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원조의 지역별 배분에서도 사하라 이남의 국가와 중동-북아프리카의 국가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중앙아시아 지역은 정체되었으며, 기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중남미 및 유럽지역의 국가들은 감소하였다.

〈표 8〉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의 소득 수준별 배분 : (1970-2006)

(단위: %)

연 도	저소득국가 (최저 및 기타 저소득)	중하위 소득 국가	중상위 소득 국가
1971	57	26	17
1981	55	19	25
1990	71	21	8
2000	62	34	4
2006/7	63	32	5

※ 자료: DAC (2007, 2008)

〈표 9〉 공적 개발원조의 빈곤국에 대한 비중

	빈곤 개도국	개도국 전체
무상공여 (Grants)	1970s: 70% 1990s: 50%	100% 100%
유상원조 (Non-Concessional loans)	1980s: 29% 1990s: 21%	100% 100%
수원국의 GDP 대비 공적원조	1990: 3.7% 2003: 2.0%	1990: 2% 2003: 1%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표 10〉 빈곤수준과 정부 업무수행성적에 따른 원조의 배분

(단위: %)

	2002	2006
세계은행 IDA의 원조배분 원칙 (빈곤수준과 정부업무수행성적)에 따른 DAC 양자원조의 배분	19%	17%

※ 자료: DAC (2007)

〈표 11〉 국제공적개발원조의 지역별 배분

(단위: %)

지역	1995/96	2000/01	2005/06	2006/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3.9	33.4	42.8	48.7
중동 및 북아프리카	12.0	11.2	17.5	14.0
중앙-남아시아	11.6	12.6	10.0	12.6
기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5.4	10.5	6.6	10.8
중남미	12.6	12.8	7.1	10.3
유럽	5.3	10.9	6.3	4.7
전체	100.0	100.0	100.0	100.0

※ 자료: DAC (2007)

## 9. 부채탕감 원조와 사회

### － 행정 인프라 및 무역에 대한 원조 증가

양자간 원조의 수단별 배분을 보면 무상원조가 유상원조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이미 보았다. 양자간 무상원조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단은 부채탕감이다. 따라서 개발투자원조와 기술원조 및 식량원조는 상대적으로 감소해왔다. 개발투자원조는 1995~96년에 30%수준에 달하던 것이 2005년과 2006년에는 14%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2007년에 들어서야 겨우 26%수준을 회복했다. Kharas는 양자간 원조의 대부

분이 공여국의 특정한 목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개도국이 자신들의 개발계획에 기반하여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원조는 전체원조의 40%도 채 되지 않는다고 계산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의 경우에도 수원국이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원조는 전체원조의 12%에 지나지 않으며, 이 수준은 지난 몇 년간 조금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계산했다 (Kharas 2007). 공적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져있고 경험적 연구도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개발투자에 대한 원조의 배분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원조 분야별 배분을 보면, 최근에 와서 사회(교육 보건 등)-행정 인프라 분야가 급증하였고, 반면에 경제 인

프라와 공업-농업, 그리고 물자 및 프로그램 등 생산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원조는 급감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원조의 효과가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의 우수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주장과 연구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

〈표 12〉 국제공적개발원조의 수단별 배분

(단위: %)

	1990-1994 평균	1995-1996 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적개발원조 (순 자금흐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양자간 무상원조 (증여)	63	63	69	75	72	80	76	72
- 기술원조	35	4	38	34	33	25	27	14
- 개발식량원조	5	5	2	2	3	0	0	*
- 인도주의적 원조	5	5	7	7	8	7	8	8
- 채무탕감	15	10	11	17	11	29	23	10
- 행정비	5	10	4	7	8	4	4	4
2. 양자간 유상원조 (차관)	11	6	1	-2	-4	-3	-3	-2
3.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	26	31	30	27	32	23	27	30

※ 자료: DAC (2007, 2008)

〈표 13〉 국제공적개발원조의 분야별 배분

(단위: %)

분 야	1985/6	2005/6	2007
사회-행정 인프라	25	32	37
경제 인프라	17	11	12
농업	12	3	4
공업 및 기타 생산	7	2	2
물자 및 프로그램 원조	22	3	1
인도주의적 지원	2	8	7
기타	14	41	35
- (NGO에 대한 지원 또는 NGO를 통한 지원)	(-)	(5)	(6)
- (무역확대를 위한 원조)	(-)	(24)	(NA)
총 계	100	100	100

※ 자료: DAC (2007,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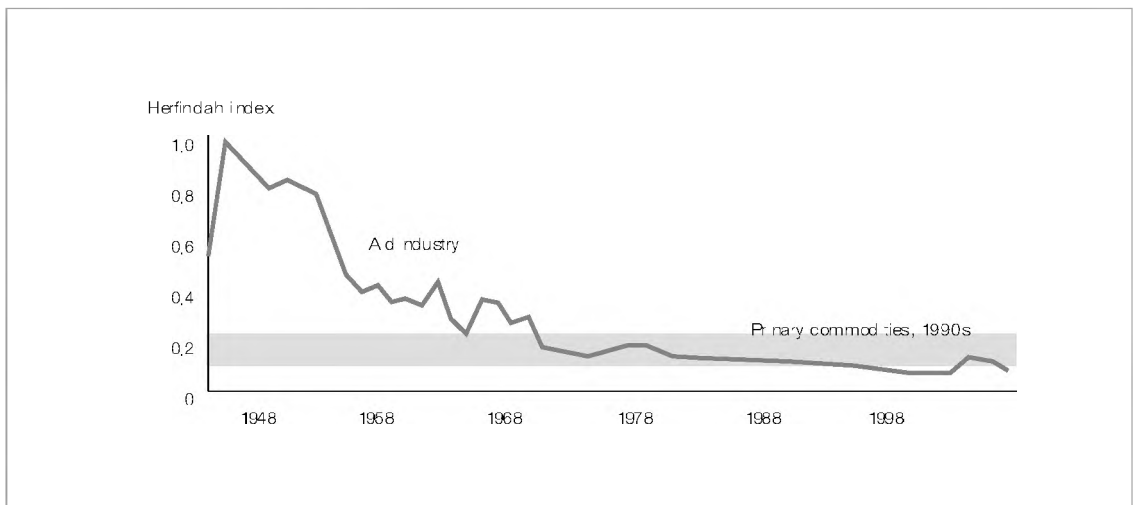
다. 또 원조 분야가 다양해져서 전통적인 원조 분야에 속하지 않는 원조, 예를 들면 인간안보 또는 내분 종식과 재건설을 위한 원조나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위한 원조가 증가하였다. 특히 무역의 확대를 위한 원조는 2005/6년에 전체 원조의 24%를 차지 할 만큼 증가되었다. 원조가 아니라 무역을 통하여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국제기구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Lee 2008, Njikeu and Cameron 2008).

## 10. 원조시장의 치열한 경쟁

1945년부터 많은 수의 다자간 원조기구와 양자간 원조기구가 새로이 설립되었고, 이렇게 생성된 원조기구는 거의 하나도 폐기된 것이 없이 오늘날까지 상존하고 있으며, 오히려 방계기구를 신설하게 되었다. 오늘

날 국제원조기구만 해도 230개에 달하며, 최근에는 22개의 DAC회원국 이외에, 중진국까지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기 위한 양자간 원조기구를 신설하여 활동하고 있다(슬로베니아, 한국, 태국, 중국, 인도,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 이러한 신생 원조공여국의 원조는 2006년에 이미 \$8십억에 달하였다 (Kharas 2007). 사적 원조기관을 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1,200개가 넘는 원조기구가 존재한다고 세계은행은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 한 수원국 당 원조기관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개별적인 원조사업의 수는 늘어나면서 규모는 줄어들고, 수원국이 원조의 제공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게 되고, 원조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원조사업으로 치달는 경향이 많아 원조의 효과성이 줄어들고, 원조기관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을 낳게 되었다.

〈그림 3〉원조시장의 경쟁상태



※ 자료: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Klein and Hardford 2005 Calculations; Verleger 1993.

오늘날의 원조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까운 상태이며 원자재 시장보다도 더 경쟁적이다. 시장의 독점도를 측정하는 한 방법으로 Herfindahl Index(HI)가 사용되고 있는데 완전 독점의 경우는 그 지표가 “1”이고 완전 경쟁의 경우에는 “0”으로 대표된다. 이 지표를 이용하면, 1950년대의 원조시장은 HI가 0.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0.1에 도달하였다.

그 결과,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점적 지원을 받아오던 수원지역과 국가가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수원국 당 원조기관의 수가 늘어나서, 수원국의 행정능력에 부담을 주게 되어 수원행정의 질과 원조의 효과성이 하락하는 현상이 빚어져 왔다.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조기관 간의 협력과 조화가 강조되고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빈곤 퇴치와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원조공여국은 이러한 정책에 일치하는 원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파리 선언).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원조공여국은 원조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하여 철저히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원조기관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원조자원을 배분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행은 산·학·연구기관 및 비정부 민간단체(NGO) 등 외부기관에 위임(아웃소싱)하거나 이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집행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또 기존의 원조기관을 원조정책기구와 원조집행기구로 분리하여 정책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예, 영국의 연방개발공사가 집행을 담당). 또는 식량 쿠폰이나 건강진료 쿠폰과 같이 쿠폰(coupon) 또는 바우처(voucher)를 발행하여 배급함으로써 원조의

집행을 단순화하고 저렴하며 용이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IV. 맺음말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최근의 추세를 통해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교훈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에 기반을 두고 또 한편으로는 냉전에 대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시작한 국제개발협력은 국제정치, 경제, 문화 등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서 그 목적과 정책의 변화를 거듭해 왔다. 한국의 원조목적과 정책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신축성 있게 적응하고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오늘날의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원조공여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목적을 충족시키려는 복합적인 요소를 지닌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수원국과 공여국은 협상과 타협을 거쳐서 상호교류와 호혜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수원국과 공여국은 국제개발협력이 지닌 상호호혜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수원국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발과 빈곤타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공여국은 자국의 목적과 수원국의 발전전략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수원국의 조정과 집행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다른

원조공여국과 협조해야한다. 또 긴급적 원조가 국적에 연계되지 않고 쓰일 수 있도록 개방해야하며, 수원국의 부채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상원조의 비중을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원조의 양적확대와 함께 원조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외에도 공공제도와 정책 및 행정의 개선, 인력과 기술개발, 기본적인 안보와 치안의 확보, 내전의 종식과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복구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원조가 되어야한다.

다섯째, 원조의 배분도 공여국의 목적을 고려하여 수원국을 선정하면서도 수원국의 필요성과 제도와 정책의 우수성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빈곤국에 무상원조의 배분을 증가하고 중·소득 국가의 인프라확충에 유상원조의 배분을 집중해야 한다.

원조의 부문과 수단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효율적인 원조로 치열한 원조경쟁에서 틈새시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원조를 위하여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섭하여 연계망을 마련하고 분업과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 [ 참고 문헌 ]

### 1. 국내문헌

이계유, 박지훈 (2007)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한국개발연구, 29권 2호 43-74

### 2. 외국문헌

Burnside, Craig and David Dollar (2000)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Sept : 847-68

Dollar, David, and Victoria Levin (2004) Increasing Selectivity of Foreign Aid: 1980-2002, Policy Working Paper 3299, World Bank, Washington, DC.

Classens, Stijn, Danny Cassimon, and Bjorn Van Campenhour (2007) Empirical Evidence of the New 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 IMF Working Paper WP/07/277, IMF, Washington, DC.

Clay, Edward J., Matthew Geddes, Luisa Natali, and Dirk Willem te Velde (2008) Thematic Study,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Untied Aid: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and of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DCs, Phase 1 Repor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rinting Office, Copenhagen.

Clements, Michael, Steven Radelet, and Rikhil Bhavnani (2004) Counting Chickens When They Hatch: the Short-Term Effect of Aid on Growth,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orking Paper 44, Washington, DC.

DAC (2008) Development Cooperation Review ([www.oecd.org](http://www.oecd.org))

DAC (2007) Development Cooperation Review ([www.oecd.org](http://www.oecd.org))

Inada, Junichi (2005) Japan's Emerging Role in Peace-building an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Have Traditional Norms Changed?, in Japanese ODA at 50: An Assessment, Asia Program Special Report No. 128: 13-16,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ashington, DC..

- Isham, Jonathan, Daniel Kaufmann, and Lant Pritchett (1995) Governance and Returns on Invest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550, Washington DC.
- Kazuo Sunaga (2004) The Reshaping of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harter, Discussion Paper on Development Assistance No. 3, FASID, Tokyo.
- Kharas, Homi (2007) Trends and Issues in Development Aid, Wolfensohn Center for Development Working Paper, Brookings Institute, Washington, DC.
- Klein, Michael and Tim Harford (2005) The Market for Ai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Washington, DC.
- Lee, Kye Woo (2008)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nd South Asia, CNAEC Research Serie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Seoul.
- Lee, Kye Woo (200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World Bank, in Yoo, Jang Hee and Kye Woo Lee (eds.)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Seoul.
- Njinkeu, Dominique and Hugo Cameron (eds.) (2008) Aid for Trade and Development, ILEAP and JEICP,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OECD/DAC (2007) 2006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Vol. 8, No. 1, Paris.
- Radelet, Steven (2003) Challenging Foreign Aid: A Policymaker's Guide to the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ashington, DC.
- Rajan, Raghuram and Arvind Subramanian (2005) Aid and Growth: What does the Cross-Country Evidence Really Show? IMF Working Paper 05/127, Washington, DC.
- Roodman, David and Scott Standley (2006) Tax Policies to Promote Private Charitable Giving in DAC Countrie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orking Paper 82, Washington, DC.
- World Bank (2008) Global Development Finance, Washington, DC.